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제언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측과 이를 막는 측의 먹살잡이’는 2008년 말 현재 남북관계를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단적인 모습이다. 정치권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상반된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보혁의 두 시각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만일 오늘 혹은 내일 결정적 통일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긴 가뭄 끝에 짝짝 갈라진 논바닥과 다름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보혁갈등 혹은 남남갈등이라는 형태로 우리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갈등구조는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해온 주요요인이었다. 집권여당은 야당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대북정책의 추진과 성과에 대한 보혁 간의 상이한 평가가 평행선을 달려왔으며, 시민사회내의 대화는 단절되어왔다. 남북관계의 주요사안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주한미군지위변경 및 한미관계, FTA 협상, 심지어 호주제 문제나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국 대북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성향이 다른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사회는 남남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가 보수진영의 협력을 유도해 내지 못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진보진영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와 정반대의 논리로 재현되고 있다. 집권세력이 유권자의 과반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의 반복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현실이다. 이는 집권층의 정책추진기반의 취약성과 아울러 사소한 정책적 오류도 가파른 지지도의 하락추세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족문제처럼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구조적 현실은 정책적 성공의 문제가 반대 진영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영역에서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독주나 배타적인 비판 일변도로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민족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의를 통한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치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며, 민족모두의 안위와 미래가 직결되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쟁화와 소모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 틀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

중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 방지를 위한 최소주의적 합의형식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방지’ 및 ‘국민합의를 통한 정책추진’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라는 시대착오적 현상에 대한 성찰적 반성의 시작으로 의미가 있다. 보혁 시민사회, 여야정치권, 언론, 사회지도층, 종교계, 노동계·재계 등 각 주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통일국민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추진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여야의 각 진영에서 통일국민협약체결을 추진하는 주체의 형성 및 세력화가 필요하며, 여야 간의 합의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분파적 이익에 따라 민족공통의 안위가 좌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 아울러 각 행위 주체들의 지속적 노력과 협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노력이 요구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생산적 협력구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집권층이 배타적으로 대북정책을 주도하거나 반대로 집권층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정책적 실패를 통한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야당은 집권당시 반대진영의 견해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오늘의 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현 집권 여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야와 보혁 양 진영은 진지한 자세로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문제는 정파와 진영의 이익을 넘어 모두의 공통된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화해하지 않으면서 남북의 화해를 이룰 수 없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한 생산적 준비에 힘을 모을 때다. 북한이 체제로서 실패한 지금 한반도 평화의 ‘관리’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자신감과 인내가 필요하다.

